

# N개의 기후정의 선언대회

- 일시: 2023.12.16 (토) 2-6시
- 장소: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강당
- 공동주최: 공공교통네트워크,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인권불씨, 장애여성공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플랫폼C,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리스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 프로그램

세션	시간	내용
사전준비	13:00-14:00 (60분)	• 참가 등록
1부	14:00-14:20 (20분)	• 인사 • 오프닝 영상 "N개의 기후정의선언" • N개의 구절 낭독
	14:20-15:00 (40분)	• N개의 기후정의 토크쇼쇼쇼!!!
휴식	15:00-15:10 (10분)	
2부	15:10-16:50 (80분)	• 체제전환을 위한 공동의 전망을 선언하자 - 발제 (10분) - 조별토론 (40분) - 발표 및 선언문 채택 (30분)
휴식	16:50-17:00 (10분)	
3부	17:00-18:00 (60분)	• 오프닝무대 by 야마가타 트웝스터 (20분)
		• 송년의밤 "이보다 즐거울 수 있을까" (40분)



기후정의선언대회 후원

■ 후원 안내

큐알 코드를 이용해서 N개의 기후정의 선언대회 행사 비용을 후원해주세요!

## ■ 목차

### I. N개의선언들 (가나다순)

공공교통네트워크 .....	1
기후위기앞에선창작자들 .....	4
문화연대 .....	5
보건의료단체연합 + 건강과대안 .....	7
빈곤사회연대 + 홈리스행동 .....	10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12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14
인권불씨 .....	16
장애여성공감 .....	19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25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2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34
플랫폼C .....	35

### II. 공동선언문

N개의기후정의선언대회 공동선언문 .....	39
-------------------------	----



### 공공교통 활동가 선언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 공공교통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 이용 감소, 운행 감축 등은 공공교통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다. 운수사업자와 운영기관의 경영 손실 및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었고, 공공교통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교통요금 인상도 추진되고 있어 공공교통 이용을 억제하고 이동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마저 상당하다.

다른 한편으로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지역과 세계적 수준에서 공공교통 노동자와 공공교통 옹호자들이 단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사회를 일구어 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이동권을 실현하는 기본서비스로서 공공교통의 위상이 부각되고 있다.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필수적 수단으로서 공공교통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해가고 있다.

공공교통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로서 우리는 공공교통 시스템이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그리고 평등을 향하도록 계획할 의무와 함께 이해관계를 갖는다. 또 공공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가로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은 사회 전체와 공동체의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시스템에 대한 더 넓은 비전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 공공교통 활동가들은 다음을 상상한다.

1. 공공교통은 필수적인 공공재다.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 필수적인 기능을 하기에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때로 실어 나르는 양적 개념인 '대중교통' 대신 '공공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이 아닌, 취약계층과 교통약자, 교통 낙후 지역을 포함한 모두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공공교통 체계를 지향한다.

2. 현재 각 수단별로, 지역별로 분절되어 있는 교통법제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교통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 대한 선언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과 공공교통이용 분담율 목표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자가용 중심체계에서 탈피해야 하며 지역간, 지역 내 교통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계층, 지역, 성별, 장애유무, 나이 등에 상관없이 이동권을 사회권으로 보장하고 공공교통으로의 질적 전환을 도모 한다.

3. 공공교통은 정부가 시민의 조세로 조성된 재정으로 투자하는 공적 대상이기에 현재의 교통재정 구조의 공공적 혁신을 전제로 한다. 이에 일몰을 앞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폐지하고 공공교통 투자에 전용하도록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또한 공공교통시설 중심으로 재편한다. 대중교통 이용확대와 부담완화를 위한 요금정책도 재정구조 개편과 연동되어 있다. 무제한 정기권을 비롯하여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할인과 무상교통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운영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4. 현재 기존 버스민영제가 버스준공영제라는 형태로 개악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이한 형태이며, 민자사업의 한 유형일 뿐이다. 궤도 민자사업도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궤도 민자사업은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한 방편이며, 오히려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되고 요금은 인상되며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또한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공적소유와 운영 확대를 위해 버스공영제가 도입·확대되어야 하며, 궤도 민자사업의 직영화 및 효과적인 억제 장치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5. 공공교통 시스템 역시 우리 사회의 일부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 시스템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공공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계획하고 확대하느냐에 따라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도,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할 수도 있다. 공공교통의 확장 및 통합은 우리 공동체의 이동권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구체적 계획이어야 한다. 노동자와 이용자의 연대를 통해 도시와 벽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공공교통 이용 불평등을 근절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소수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지원하며, 적극적인 모달시프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 우리 공공교통 활동가들은 공공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해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음을 결의한다.

(1조)

우리 공공교통 노조는 속한 지역의 교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역량을 구축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공공교통 노조는 조합원들이 공공교통 노동자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을 확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공공교통 노동자는 이용자를 더 많이 만나고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특히 모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회운동과 연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의한다.

(2조)

우리 공공교통 노동자들은, 공공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교통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사회연대 요금제도, 무제한 정기권, 무상교통 등 사회적 요금정책의 도입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을 위한 정부의 재정책보 투쟁을 결의한다.

우리 공공교통 노동자들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3조)

우리 공공교통 노동자들은, 공공교통 영역에서 일하는 교통 노동자들이 인정받고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공공교통 노동자들은,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투쟁을 결의한다.

우리 공공교통 활동가들은 모두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 불평등 해소, 사회적 연대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통합적인 공공교통체계 구축과 확대를 갈망하며, 이를 위해 단사와 업종을 넘어 단결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공공교통학교 참가자 일동

##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의 선언문

1. 기후위기는 미래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이미 도래한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은 기후위기를 각자의 고유한 언어로써 증언하고자 합니다. 증언의 연대로 서로에게 응답하고 서로의 삶에 공명하고자 합니다.

1.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은 창작장 안에서의 돌봄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호의존과 관계 맺기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창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부수적인 작업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는 모든 예술 활동이 시장화 되는 지금의 자본적 주목경쟁과 관심경제를 문제시하며, 이에 대한 대안적 장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1.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은 기후정의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매개로 하여 창작자 간의 수평적이고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착취와 경쟁, 성장을 향해 내달리는 지배적 존재 양식과는 다른 존재 양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1.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지금의 자본주의와 식민주의, 수출주의를 비판합니다. 이 거대한 타자화의 조류에 맞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예술 활동은 이에 맞선 저항적 실천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문제적인 체제를 심문하면서 이를 전환하기 위한 공동의 움직임을 만들어나가하고자 합니다.

\*본 선언문은 이후에 함께 결합한 구성원과의 토론과 합의에 따라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22.07.



## 자본을 위한 성장의 도구에서 벗어나 탈성장과 생태문명을 향한 '세계관이자 태도로서 문화'를 제안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리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긴다. 기후재난, 기술과잉, (초)고령사회, 슈퍼바이러스와 팬데믹, 사회 양극화, 혐오 범죄...우리는 지금 기후재난을 비롯하여 다중(자연-개인-사회 구성체) 위기의 재난 사회와 마주하고 있으며, 각각의 위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의 바탕에 인간이 만들어 온 산업문명으로서의 제국적 자본주의 삶-체제가 있다. 오직 인간 중심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서만 무차별적으로 팽창해 온 이 문화는 너무나 위협적이고 파괴적이어서, 어느 새 지구의 지질층을 변형시키고(인류세) 인간 존재 자체의 대멸종(6번째 대멸종)을 경고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과도한 수탈과 확장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었던 이 문명은 플라스틱과 각종 오염물질로 가득 찬 지질층을 그 흔적으로 남길 예정이다.

기후재난을 비롯하여 지금의 다중 위기는 문화의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이며 세계관의 위기다. 다중 위기에는 다양한, 하지만 서로 연결된 원인이 존재한다. 더 늦기 전에 오직 인간의 편리함과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작동해 온 제국적 자본주의 삶-체제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킨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인간 중심의 일방적인 성장과 경쟁의 가치에 대해 다시, 다르게 질문해야 할 때다.

거대한 문명의 위기와 전환 앞에서 '인간-성장-경쟁'을 극복하고 '생태-순환-협력'의 삶-체제 방식을 상상하고 실천하기 위한 문화가 필요하다. 이는 대안적인 세계관의 문제이며, 아름다움에 대한 본질적이고, 새로운 문제설정을 의미한다. '인간-성장-경쟁'보다 '생태-순환-협력'의 삶-체제가 가지는 가치와 행복은 경제와 정치만이 아니라 삶을 둘러싼 세계관(미학)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인간 존재(다양한 생명체)와 공존하는 생태계, 목적과 결과가 아닌 존재와 과정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순환하는 일상, 다양한 주체와 객체 사이의 협력을 위한 공통감각 등이 축

적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문화는 더 이상 성장을 위한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공생을 위한 탈성장과 생태문명의 세계관이자 삶의 태도이며 생활체계다.

탈성장 시대의 문화·예술 활동은 물건을 만들거나 전시하기보다는 라이프스타일과 태도를 가지는 실천에 주목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미적 존재이며, 문화·예술은 삶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에 관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탈성장 시대의 아름다움은 제국적 자본주의 삶-체제의 상품 미학과는 다르게 쓰일 것이다. 탈성장과 생태문명의 가치 위에서 아름다움은 생명체에 내재하는 생동감을 감각하는 것이며,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축적되고 심화된다. 이는 죽음과 소멸을 포함한 생명을 긍정하고 불확실성을 수용하며 과정으로서의 가치로 현존하는 아름다움이다. 결과, 성장, 경쟁이 아닌 아름다움을 통해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탈성장 시대의 문화사회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 혹은 질문하고자 한다.

- 이제 우리는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탈성장과 생태문명의 토대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인간만이 아닌 다양한 생명체의 존재를 포용하며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할 것이다.
- 우리는 탈성장과 생태문명의 아름다움으로서 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할 것이다. 우리는 '인간-성장-경쟁' 중심이 아닌 '생태-순환-협력'의 가치 위에서 문화에 대해 다르게 질문하고 상상하며 행동할 것이다.
- 우리는 탈성장과 생태문명을 둘러싼 미적 성찰과 상상 그리고 표현과 공감의 장으로서 문화공간을 접근할 것이다.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등은 이제 인간의 시선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와 비인간 존재의 감각을 수용하며 탈성장과 생태문명의 세계관을 만들어 가는 삶-체제의 거점이 돼야 한다.
- 우리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실천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현존하는 문화 활동 내부의 탄소중립 같은 과제에서부터 대안적 삶의 방식을 향한 사회적 기획에 이르기까지, 탈성장과 생태문명의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이다.

## 기후위기는 건강과 생존의 위기, 이윤보다 생명을

기후변화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기후위기는 폭염, 폭풍, 홍수와 같은 점점 더 빈번해지는 극한 기상 현상, 식량 체계의 붕괴,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량, 물, 매개체 전파 질병 및 정신 건강 문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는 생계, 평등,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및 사회적 지원 구조 등 건강에 대한 많은 사회적 결정요인을 악화시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2023년 지구 기온은 10만 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19년 한 해에만 노인 35만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말 유럽 남부,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더위 관련 사망자 수가 지금의 열 배로 늘어날 것이라 한다. 더위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그리고 실외 노동자와 주거가 열악한 이들에게 특히 큰 충격을 준다.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게 매년 7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원인이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은 화석연료라는 공통의 원인을 갖는다. 기온상승은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을 정체시켜 대기오염을 더 심화시킨다. 대기오염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더 극심한 피해를 안긴다.

인수공통감염병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코로나19는 21세기 들어 6번째 발생한 팬데믹이다. 이전 시기의 팬데믹은 세기당 2~3회에 그쳤으나 20세기 말부터 팬데믹은 더 빈발하고 있다. 소고기, 팜유 등을 생산하는 거대 농축산 기업들은 열대우림을 파괴해서 기후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박쥐를 비롯한 야생동물과 사람들의 접촉을 늘려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도 높이고 있다. 또 기후변화로 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남부 등은 박쥐 종에게 알맞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발발과도 연관이 있었다.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의 질병은 모기 같은 매개체에 의해 전파된다. 매개체 전파 감염병은 지금도 매년 70만 명 이상의 죽음을 초래한다. 그런데 이런 감염병을 일으키는 매개체 곤충은 온도가 높을수록 번성한다.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모

기 발생은 27% 늘어난다. 기후변화 때문에 향후 수십억 명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먹거리 불안정도 심화시키고 있다. 기후재난으로 세계에서 주요 곡물 생산량은 저하되고 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작물에서 철, 아연, 단백질 등 인간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금도 세계 사망의 5분의 1이 먹을거리의 생산과 분배 체계의 불평등과 연관돼 있다. 불평등한 사회가 식량 위기와 맞물려 기아와 빈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인류 전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최상위 1%의 부유층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배출하는 양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사람과 지구를 착취하며 화석연료를 태워 경쟁적 이윤추구에 몰두해온 기업주들과 지배층들이 위기의 원인 제공자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분배할지를 이들 소수가 결정한다. 대중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대다수 노동자들과 평범한 이들은 이 체제에서 착취와 차별, 억압과 소외에 짓눌려 왔고 이제 생존까지 위협받게 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건의료 체계도 왜곡되어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을 키웠다. 한국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누구나 누려야 할 필수적 기본서비스인 의료도 시장에 맡겨져 있다. 한국에는 민간병원이 많지만 코로나19 환자는 대부분 5% 정도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돌봐야 했기에 의료는 쉽게 붕괴되었다. 보편적 의료보장이 없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비용도 천문학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와 치료를 포기했고 그래서 방역도 잘 되지 못했다.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무상의료 서비스가 구축된 유럽 국가들도 긴축과 민영화 압력에 수십 년 간 노출되었다. 공공병상 수는 반토막이 났고 인력도 부족했다.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주요 원인이다.

공공연구에 힘입어 신속하게 개발된 백신은 몇몇 다국적 제약사의 독점 상품이 되어 충분히 생산되지도, 평등하게 분배되지도 못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백신 독점으로 9명의 억만장자가 새로 생겼지만, 저소득국가 국민들은 백신에 접근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인류는 세계적 차원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

기후위기는 보건의료 시스템에 커다란 도전이다. 더 심한 폭염과 극한 기상현상, 더 위협적이고 빈번한 팬데믹, 더 많은 수인성 질환과 정신 질환과 항생제 내성균의 유

행 등이 예상되는 세계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려면 이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조직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시장에 맡겨진 의료를 공공적으로 전환해야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건의료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는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서비스 부문이다. 전 세계 의료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발전소 514개에서 배출되는 양과 맞먹는다. 중요한 것은 낭비적이거나 심지어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의료 서비스를 억제하는 것이다. 과잉 진단과 치료가 돈벌이가 되는 영리화된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킨다. 예컨대 세계적으로 수십만명이 갑상선암, 유방암 등으로 과다진단된다. 제약회사들은 효과 있는 신약을 만들기보다는 마케팅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 불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을 조장하고 기존에 정상 범주이던 상태를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기후재난 시대에 필요한 의료는 에너지 낭비적 영리의료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공공 의료·돌봄체계다. 또 사람을 살리는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를 막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오늘날 건강은 개인의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팽배하다. 몸을 관리하고 가꾸며 긍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자아를 유지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자 자산이라는 신화다. 그러나 사회의 일부이자 자연의 일부인 개인은 홀로 건강할 수 없다. 지금의 사회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생존 조건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진정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사회적이고 집단적 해결책 뿐이다. 그것은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다수의 필요와 생명을 위해 지속 가능한 생산이 이뤄지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오랜 구호대로, 이윤보다 생명을!

## 기후정의를 위한 반빈곤·주거권 선언

집이 물에 잠기고, 강이 넘쳐서 매일 지나던 지하철도를 덮쳤다.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잃고 있다. 기후위기를 빼고서 지금의 재난을 설명할 수 없다. 지구를 불태우는 이들은 따로 있는데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반지하 세입자인 내 집이 물에 잠겼는데, 서울시는 그 집주인에게 재개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재개발의 역사에서 새집이 지어져도 원래 살던 세입자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도시 외곽으로 쫓겨났다. 이미 집이 상품이 되어버린 사회에선 더 많은 돈과 집이 있는 사람만이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불평등 자체가 재난이다. 집이 재난이 되지 않는 세상이,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정의다.

우리는 집으로 돈 버는 사회, 이를 가능케 한 체제에 균열을 가하고 모두의 온전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후정의임을 선언하며 다음을 말한다.

하나. 기후위기 시대, 집은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집이 없거나 열악한 거처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다치거나 죽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난방시설이 미비한 숙소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고시원에서는 자구적인 난방으로 추위에 대처하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쪽방과 거리에서는 기본 안전 수칙인 '자가격리'조차 불가능했다. 기후 재난으로부터 일차적 방어막이 되어주는 집은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왔다. 취약거처, 지(하)옥(탑)고(시원), 거리노숙, 에너지빈곤, 침수피해 등 주거빈곤을 해결해야 한다.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 시대, 집은 보편적인 인권으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 사는(live) 것으로 주인이 되는 집을 상상한다.

비 새는 집을 고치고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서 받아내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정의의 한 모습이다. '환경에 좋은 집'만 늘어나는 것이 과연 답일까. 친환경적 기술로 지은 집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나 살아가는 동안 탄소 배출을 줄일 수는 있어도 그 집에 누가 살게 되는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점유 형태에 따라 권리를 차등적

으로 갖지는 않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개발 이후 세입자가 안전하게 주거를 유지하도록 하라는 주거권의 요구는 내가 사는 집을 내가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의 요구, 어떤 에너지를 쓰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후정의의 요구와 별개의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으로도 집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상상한다.

하나. 내 집 갖기 경쟁을 넘어,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자.

집으로 돈 버는 사회는 집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회와 동의어다. 치솟은 집 값으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실, 부수고 짓기를 반복해 엄청난 탄소를 내뿜고 집 부자 배만 불리는 주택정책은 지구와 인간 모두에게 해롭다. 상품으로의 집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주거를 제공해 안정성을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권 보장과 기후정의 실현의 핵심이다.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는 5년 사이 20% 가까이 급증했지만,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주거권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한다. 더불어 철근 빼먹고 나쁜 자재로 대충 짓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탈탄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그 집에서 입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최소 30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개인적 실천으로의 집 갖기 경쟁을 넘어, 집을 둘러싼 공동의 전망을 그리자.

하나. 체제의 벽을 넘어 새로운 길을 내자

노동, 의료, 교육, 주거와 같은 필수적인 권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보장된다면 모두에게 열린 사회일 것이다. 모두가 겪고 있는 삶의 위기는 각자의 이름과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기후위기로 연결되고, 기후정의로 만나고 있다.

기후위기의 최일선에 선 당사자인 우리는 피해자로 호명되는 것을 넘어 주거권, 기후정의를 만드는 주체로 설 것이다. 우리가 길이고 우리가 대안이다. 우리 함께 견고한 체제의 벽을 넘어 모든 존재가 안전하게 살아갈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자!

2023년 12월 16일  
빈곤사회연대 · 홈리스행동

## 누군가를 초대할 수 없는 한국사회, 우리가 기후정의와 함께 재생산정의를 촉구하는 이유

심각한 수준의 인구감소로 곧 대한민국이 소멸할 위기라고 합니다. 이대로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한숨과 개탄이 연일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물습니다.

우리가 과연 인구감소로 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다가올 소멸을 걱정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존재들이 전쟁과 폭력, 구조적 차별로 소멸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세계를 찾아올 누군가에게 '살만한 세상'으로 소개하며 초대할 수 있을까요?

차마 누군가를 초대할 수 없는 기후재난의 시대. 이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은 착취와 파괴, 재생산의 통제입니다.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고, 생산성 있는 인구만을 유지하기 위해 이 체제는 우리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해 왔습니다. 장애나 질병이 없는 이성애자 남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혈연 관계를 통해 가족을 이루고,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동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정상적'으로 여기는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체제, 소비능력으로 존재를 증명하라는 체제, 이성에 핵가족을 이룸으로써 정상성을 증명하라는 체제, 여성과 성소수자에게 성적 낙인을 전가하는 체제에서 누가 살아남고 있나요? 이 체제는 구조적인 폭력을 담고 있어 모두의 삶을 위협하지만, 취약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위협을 당합니다. 차별과 낙인, 배제의 대상이 되거나, 주거와 노동, 교육, 의료에서 취약한 여건에 놓입니다. 국가는 함께 관계 맺고 돌봄을 나누며 살 수 있게 만드는 대신 '보호'의 이름으로 시설에 살게 하거나 쫓겨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음에도 빈곤에 시달리며 사는 곳과 먹는 것을 돌볼 여유가 없어 더욱 잦은 위험과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과 소비를 부추기며 경제성장과 이윤을 위해 세계 곳곳이 파괴되는 동안 수많은 생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물도, 땅도, 사람도, 동식물도 그저 자원이 되어 버린 세상에서 누군가는 재난 속에서조차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지속할 만한 삶의 양식과 터전이 계속해서 파괴되면서 이주 또한 가속화 되었습니다. 가부장제에 기



반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이 초래한 재생산의 위기는 다시금 자신의 터전과 이주한 자리를 오가는 수많은 여성들의 무임금 또는 저임금의 재생산-생산 노동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저마다 기후재난, 인구소멸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대응이 아닌 '멈춤'을 요구합니다. 마치 위험한 작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원치않는 임신을 한 당사자가 그 어떤 강요도 없이 중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일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장시간 임금노동의 시스템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즐거움을 찾아갈 여유와 섹스할 시간,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소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멈추고 삶의 공간과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인과 혈연에 기반한 제도 중심의 관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금 노동의 생산성이 기대되지 않는 이들을 시설에 가두고, 국가가 규정한 제도 밖의 가족 구성과 출산, 양육, 돌봄을 통제하며, 끊임없이 누군가를 추방하면서 동시에 일시적인 노동력 자원으로 활용하는 이 체제가 바로 착취와 파괴를 지속해 온 지금의 체제이며 기후위기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악순환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전환을 요구합니다. 생산성과 정상성의 체제에서 즐거움과 돌봄의 체제로 바꾸어냅니다. 즐거움과 돌봄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지 몰두합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살인과 폭력, 착취로 이윤을 내고 이득을 보는 지배권력에 저항하며, 모두가 즐거움과 돌봄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안합니다. 세어는 즐거움을 금지당하고, 돌봄에서 배제된 자리에 주목하고 가장 저항적이고 창조적으로 즐거움과 돌봄을 발명하는 이들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모두의 즐거움과 돌봄이 가능한 조건은 평등과 존엄을 실현해나가는 과정과 나란하며, 사회적 자원의 재배치와 공공성의 급진적 재구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세어는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에 주목하며,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운동에 함께합니다. 이윤을 위한 생산성만을 목표로 우리의 삶과 관계, 돌봄의 시간과 공간을 차별하고 통제해 온 체제를 멈추고 재생산정의로의 전환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 약탈전 전환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으로 에너지 체제를 바꾸자

누구나 기후정의를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약탈적 전환으로 가득하다. 자본과 기득 권력의 힘을 강화하는 약탈적 전환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적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 에너지 소비 중 화석연료의 비중은 82%에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전쟁과 경제 위기는 에너지 전환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가진 자들의 부를 위해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가 버젓이 지속되고 있다.

에너지 체제의 약탈적 구조는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를 가리지 않고 자리 잡았다. 2022년 4대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14조원에 달했다. 기업 고유의 노력과 상관없이 에너지 위기로 마진이 커지면서 벌어진 일이다. 같은 해 3대 민자발전사의 영업이익은 2조 4천억원이었고, 올 3분기 2조원을 돌파했다. 부분 민영화된 천연가스와 발전 산업의 틈새에 기생해서 누린 특혜이자, 가스공사와 한전의 미수금과 적자를 누적시킨 결과이자, 국민의 에너지 공공요금을 약탈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는 그릇된 산업 구조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고 대기업의 특혜, 기울어진 에너지 시장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공부문과 시민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도 민간기업이 돈벌이를 위해서 수행하면서, '최저 비용'과 '이윤'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 때로는 산지와 농어촌을 파괴하며 농어민을 내모는 재생에너지 난개발이 발생하고, 때로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바다를 선점한 초국적 금융자본과 대기업이 수조원을 넘나드는 금액의 해상풍력 사업을 70개 이상 허가받았다.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민자사업의 대상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 민영화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성큼 다가왔지만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2025년 태안부터 시작되어 보령, 하동, 삼천포 등 2030년까지 20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된다. 여기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가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다른 곳으로 하루빨리 이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며 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정비 일자리는 기존보다 더욱 열악하고 낮은 대우에 그친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노동자에겐 실직의 공포와 노동의 질 악화로, 삶 자체를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누구나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약탈적 전환이 지배적이다. 고용위기 방치하는 탈석탄, 천연가스와 발전 산업의 지속적 민영화, 에너지 대기업의 폭리, 민영화되는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측면에서 그러하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 더 이상 추상적인 구호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약탈적 전환을 중단시키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사회적 열망이자 투쟁의 이름이다.

기후정의를 노동자와 시민의 저항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압살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대기업과 금융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천연가스 직수입 중단, 민자발전사 규제, 재공영화와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약탈적 전환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바꾸는 투쟁을 시작하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더 늦출 수 없다.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노동자와 시민과 함께 약탈적 전환을 막고 정의로운 전환을 쟁취하는 길을 함께 갈 것이다.

2023.12.16.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후정의선언

## 기후정의를 위한 농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국가 간 그리고 국내에서의 불평등에 기초한 현 체제가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불평등은 지역과 국가의 산업구조를 왜곡하고 파괴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안정과 분쟁을 야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 이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환경 이주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복잡한 이주의 원인을 단순화하여 환경 이주민과 그 외의 이주민, 난민과 그 외의 이주민, 강제적 이주자와 자발적 이주자로 이주민을 양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이러한 구분은 이주민을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로 나누는 명분이 된다.

이주민들은 이주한 곳에서 다시 불평등 및 차별과 마주치는 공동의 경험 속에 있다. 이주민들은 바로 그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른 그룹들과 함께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앞으로 반복될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들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이주민들은 필수적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마스크조차 동등하게 배분받지 못하고,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채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의 공격을 받으며 안전과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았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맞서, 기후위기를 야기한 현 체제에 맞서, 더 작은 책임, 더 큰 피해라는 기후 부정의에 맞서,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후정의로 가는 길에 있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또한 이주민이 단지 보호받아야 할 취약한 피해자의 위치에 머무르는 것을 우려하며, 이주민이 기후정의운동의 주요한 당사자이자 연대자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오늘 특히 기후정의를 위한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주목한다.

먹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현재의 농어업과 먹거

리 체계는 이윤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가 지배하고 있다. 이 체계는 화석연료, 화학비료, 농약, 살충제, GMO, 공장식 축산, 성장 호르몬, 항생제, 그리고 환경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지탱되는 체계이며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체계이다.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이 체계를 가장 밑바닥에서 떠받치도록 강요받고 있다. 농업과 어업에 대한 차별, 이주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중첩된 차별을 감내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 산업재해보상 등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법 적용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을 옮길 권리가 없이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씨를 뿌리고 작물을 수확하다 단속되고, 구금되고, 강제추방되고 있다. 기후 재난에 무방비인 가건물 숙소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야외 작업장에서 폭염과 한파, 홍수, 가뭄, 산불에 목숨을 잃고, 생존을 위협받으며 일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농어업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이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현 먹거리 체계에 대한 저항의 주체이며 연대자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1.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은 체류자격의 유무 및 종류에 상관없이, 농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원하는 곳에서 농어민으로 일하며, 가족과 함께 정착해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농어업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은 체류자격을 이유로 단속되고, 구금되고, 강제추방 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그 누구도 강요된, 예속된, 강압적인 노동을 요구받아서 안 된다. 국가는 물론이고 농어민과 농어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는 농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4. 모든 농어업 이주노동자는 노동법이 정하는 모든 기준을 동등하게 적용받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모든 농어업 이주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안전하지 못한 노동환경을 보고할 수 있는 권리, 환경과 사람에게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을 거부할 권리, 기후재난을 비롯한 위험을 피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권리

가 있다.

6. 모든 농어업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은 안전하고 인간다운 주거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기후 재난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이주가 필요한 경우 그 농어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7. 모든 농어업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은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장제도,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농어촌 공동체에 우선적인 조치, 기후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긴급·필수 의료서비스를 동등하게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

8. 모든 농어업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은 기후 위기의 영향을 이해하고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생태적 농어업에 대해 교육받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정보와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

9. 모든 농어업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은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사업 또는 계획의 준비 및 시행 단계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노동조합, 협동조합 또는 스스로 선택한 조직 및 결사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0. 농어업 이주여성 노동자는 모든 여성 농민과 더불어 공동체 활동, 토지 및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 재산에 대한 권리, 정책에 참여할 권리, 일자리, 보수,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여성공감

---

무엇이 정상인가? 불구의 몸들은 왜 시설에 감금되었는가? 시설사회는 어떤 권력과 공모하며 유지되고 있는가?

장애여성 운동은 정상화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설화된 사회와 불화하며, 소수자를 억압하는 질서에 저항해 왔습니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이성애중심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보호주의의 권력은 불구의 몸들을 사회에서 내몰았습니다. 성장과 효율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는 장애인에게 극복과 재활을 강요하며 생산의 컨베이어 벨트에 몸과 속도를 끼워 맞추라고 하거나, 맞추지 못하면 비생산적이라며 시설에 감금시켰습니다. 자본의 이익 앞에 모든 생명과 자연을 파괴시키는 현 체제에서 '꼬인 대로, 생긴 대로 이상하게 살고 싶다'는 구호는 이질적인 존재들이 나답게 다른 존재들과 뒤섞여 살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위험의 존엄성과 실패할 권리로 나답게 살아가며, 서로 의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회가 부여하는 정상성의 자격을 거부하며 능력, 효율 중심의 속도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나와 동료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원이 없는 몸들의 서로 돌봄을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장애, 인종, 빈곤,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 나이 등 삶의 교차성을 성찰하며, 위기로 내몰린 동료들과 더 단단하게 연대하여 기후위기에 저항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몸들은 시설에 분리됐습니다. '보호'라는 명목으로 삶에 대한 통제와 착취를 정당화했습니다. 국가는 탈시설 권리보다 시설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돌봄 비용이 더 적게 든다며 효율을 이유로 시설을 재생산합니다. 시설이 유지되는 권력은 자본의 작동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인에 대한 노동착취를 돈버는 '사회활동'이나 탈시설을 준비하는 '훈련'으로 포장하며 탈시설 권리를 유예시킵니다. 이에 맞서 우리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통해 '노동'의 의미와 실천을 다시 정의합니다.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청도대남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국가는 코로나19 재난에서 장애인과 밀려난 이들을 시설에 다시 가두는 코호트격리를 시행했습니다.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집단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묵인하며 시설화를 강화했습니다. 탈시설 운동은 시설사회에 저항하는 장애인이 운동을 조직하고, 상호 돌봄을 도전하는

체제전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나오더라도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기 어렵다면 나를 돌보며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시설화된 장소에서 저항하는 몸들과 함께 안전하게 나를 돌보는 삶터, 다른 생명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자본의 폭주와 권력의 횡포를 중단하는 싸움을 계속해 가고 싶습니다.

느린 것이 우리의 저항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요? 장애여성은 늘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빠른 성장과 효율, 각자도생이 삶의 조건인 사회에서 꼬인 몸, 느린 몸의 속도는 저평가됩니다. 완벽하게 혼자서 살아내지 못한다며 권리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느림'은 기후위기를 만드는 자본주의 성장과 속도, 효율성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킬 감각이 아닐까요? 우리는 꼬인 몸, 뒤틀린 몸, 불구로 살아온 몸을 드러내며 이동할 권리, 시설을 나올 수 있는 권리, 노동할 권리, 삶을 살아갈 권리를 말합니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의존과 돌봄도 없습니다. 느린 몸으로 의존하는 삶은 자연과 인간-비인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상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돌봄받는 몸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양한 갈등과 역동 속에서 서로 의존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이 의존이라면, 이 사회는 의존할 수 있는 자원과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느린 몸과 속도를 이유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질문을 던지며 느린 몸이 지닌 속도를 포기하지 않고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답게 살 수 있는 연대의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꼬인 채로 생긴 대로 이상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기후위기 문제를 실천하기 어려운 몸으로 이야기되는 것도 거부합니다. 서로의 관계에 공명하고 스며드는 상호돌봄의 삶을 상상해 봅니다. 불구의 몸들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부딪혀 온 상호돌봄의 경험은 다른 불구의 몸들과 만나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며 연대할 것입니다. 불구의 몸들이 실천해 왔던 상호돌봄의 힘은 자본과 권력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장애여성 운동은 느리지만 서로 의존하고 갈등하며 기후정의운동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며 지키는 책임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사회 반대, 모든 생명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존하고 싶다!**

**불구의 몸, 느림의 힘과 연대로 기후위기를 만든 체제와 권력에 저항하자!**

**느림의 힘, 상호돌봄의 연대, 불구의 정치로 함께 살아남자!**

**느리게 움직이며 장애여성의 속도와 관점으로, 의미 있게 끝까지 존재하고 싶다!**

2023년 12월 16일

장애여성공감



## 기후정의운동과 불안정노동철폐운동이 만나기 위해

바야흐로 기후재앙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더더욱 빈번해지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생태계 붕괴, 자연재해, 감염병 재난사태 등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아니고서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종래의 '환경보호' 캠페인 수준으로는 기후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날이 갈수록 자명해지고 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 전지구적인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위기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도 무성하다.

그러나 오늘날 기후위기를 가속화한 주범인 기업 권력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 나아가 공공적인 재편을 말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미약하다.

자본의 무한성장, 이윤추구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우리는 다른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자연과 인간에 대한 끝없는 착취와 억압, 수탈을 통해 굴러가는 자본주의체제 아래 가장 고통받는 당사자 중 하나인 불안정노동자들이 기후정의운동의 주체로 서야 하는 이유이다.

###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

정부와 자본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석연료 산업을 그린·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2030년까지 순차 폐지가 예고된 석탄화력발전소가 그렇고, 2040년까지 단종, 퇴출 수순을 밟게 될 내연기관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국내 산업부문 탄소배출량의 76%를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산업 역시 연료대체, 설비전환 등 직·간접적인 산업전환의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정부와 자본이 말하는 산업전환이란 새로운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제기되는 신산업 진출 프로젝트에 다름 아니다. 자본주의 성장시스템을 탈피하지 못한 산업전환

은 필연적으로 인적구조조정을 수반한다. 이 때 노동조합은 폐쇄되는 공장,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응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탈탄소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는 산업전환에 따른 비용을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자본과 갈등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요구다. 사라지는 일자리를 가까스로 지켜내는 것을 넘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자의 일자리 요구는 어때야 할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가령, 이윤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생태회복에 기여하는 일자리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지 말이다. 일자리 분배 및 유지라는 노동조합 고유의 목표를 뛰어넘어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의 성격을 논의하고 설계하는 과정 전반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빼놓고서는 이 문제를 말할 수 없다. 화석연료를 태워 구동하는 내연기관차는 3만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가 엔진 부품을 대체해 내연기관차 기존 부품의 30%가량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된다. 전기차 전환에 따른 완성차 하청업체, 부품사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일자리 상실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완성차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용유지 전략은 자동차산업 불안정노동자들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의 꿈무니만 좇아서는 완성차 대기업, 부품사, 영세하청으로 나뉘어 각자 공장에서 살아남기, 일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렇기에 불안정노동 문제를 포괄하는 노동의 대응이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자동차산업, 발전산업을 막론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의 등장과 기술 진보가 오히려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 자본은 그중에서도 산업생태계의 주변부에 자리한 불안정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벌어지는 구조조정 꼼수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은 결국 공동의 요구와 투쟁뿐이다.

### **속도를 줄이고 흑사를 멈추기**

기후재난은 건설, 운송, 배달, 환경미화, 전기통신 등 주로 옥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화석연료를 태워 막대한 이윤을 거둬들이는 자본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 상황에 노출됐을 때조차 이들의 보호는커녕 파괴적인 생산체제를 지속할 뿐이다.

생활물류산업은 코로나19라는 기후재난을 틈타 일약 언택트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생활물류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대부분 이동노동을 하고 있는데다가, 단단계

하청 또는 특수고용·플랫폼 등 고용구조의 왜곡도 심각하다.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라 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 종사자들의 상당수는 24시간 노동체제에 결박돼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해당 업종에서 자본이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 불안정노동자들을 분/초 단위로 쪼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노동을 하는 이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동을 위해서는 극단적인 성과 경쟁을 부추기는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 오직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위해 고안된 물량과 임금(건당수수료)의 연계를 끊어 내고 일의 속도를 적극적으로 늦춰야 한다.

건설산업은 또 어떤가. 원청 건설사의 공기단축 압박, 하청 건설사의 원가절감 압력이 라는 이중의 착취구조가 만연해 폭염기에 쓰러지거나 장마철 무리한 작업강행 지시로 감전사하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이윤 논리에 포획된 건설사 원하청 자본이 노동자들을 일용직·계약직으로 부려 먹으니 ‘빨리빨리 속도전’도 ‘날림공사’도 피 할 수 없게 된다.

토목공사 과정에서 나무를 베고 흙과 바위를 캐내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을 짓고 부 수는 과정, 심지어 건축자재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탄소배출이 이뤄진다. 건축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빈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건물의 에 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법을 채택하는 등 에너지와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계획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개발과 확장 중심의 도시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노른자 땅’을 노리는 건설 자본의 쟁탈전을 종식하는 것뿐 이다.

## 위험은 당연한 게 아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자연재해와 감염병재난 상황은 공중보건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발발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징후 였다. 우리는 이 같은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비로소 실감하게 되 었다. 그러나 보건의료, 돌봄 노동자를 비롯한 필수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은 당연한 의 무로 간주되고, 그들의 권리는 나중으로 밀려나는 모습 또한 우리는 목격했다.

필수노동자들은 위기상황이 생길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한다. 지진이나 산 불, 집중호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재난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노동자들은 공동체의 안전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상 일터의 재난위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야만 했다.

기후재난 현장을 최일선에서 맞닥뜨리는 필수노동자들에게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위험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노동자의 알 권리, 거부할 권리, 참여할 권리가 지금보다 더욱 확대돼야 한다.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실현은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노동에서 시장적 접근을 배제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있어 '정의로운 전환'은 곧 일터와 사회에서 기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화석연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공공 중심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한 전환' 계획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권리가 보장될 때, 노동자들은 불건강하고 위험한 일터 환경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 과도한 노동시간의 단축, 적정인력 총원 요구 등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낼 것이다. 이 같은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권, 건강권 보장 요구는 이윤추구에 매몰된 자본과 끊임없이 불화할 수밖에 없다.

### **체제전환을 위한 불안정노동자들의 결집과 투쟁을 시작하자**

지금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탈탄소 구조조정에 착수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정한다면 착취와 추출 중심의 경제생태계를 사회 전반의 필요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편해 나간다는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할 역량은 결코 준비할 수 없다.

체제전환이라는 담대한 전망은 결국 내가 일하는 현장의 구체적인 과제와 만나야 한다.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 확장이 어떻게 체제전환과 연결될 수 있는지 더 넓은 시야 속에서 더 많이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은 불안정노동자들이 기후정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 서는 과정이 될 것이다. 산업전환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권리주체로서 불안정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아래로부터 만들어가자.

2023년 12월 11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존엄과 평등으로 기후정의를! 2023 다시 쓰는 세계인권선언 읽기

기후위기라는 말이 인삿말처럼 섞여드는 시대다. 과연 이 위기는 무엇에 대한 위기인가. 위기를 인사로 나누는 사회, 그러나 이 위기의 영향은 결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날씨를 주제로 나누는 안부 끝에는 지난 밤 폭우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장애인과 반지하에 물이 차올라 지낼 곳을 전전했다는 트랜스젠더의 안녕이 머문다. 저녁 찬거리가 마땅찮다는 한숨 뒤에는 농작물재해로 밭을 통째로 갈아엎었다는 농가의 절망과 비닐하우스에서 생을 마친 이주노동자의 부고가 그늘져 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성소수자들은 재난상황을 대비해 유언장을 쓰고 경쟁이 곧 위기인 청년들은 더욱 '갓생'에 매진하며 불안을 재운다. 폭염에 쓰러진 노동자의 쉼 권리와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는 생존의 요구에 맞닿고 사업장 이동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와 22년동안 이동권을 위해 투쟁해온 장애인들의 절규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반추하게 한다.

불평등이 곧 기후위기다. 오직 이윤만을 쫓아 무한 증식한 자본과 권력이 빚어낸 위기이며, 우리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인권과 존엄, 평등과 자유의 문제이다.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훼손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 지금의 한국사회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민원이 행정의 기준이 되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보다 참사의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원흉으로 지목된다.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인권과 존엄, 평등과 자유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는 자본과 권력의 거대한 쳇바퀴를 멈추고 존엄과 평등이라는 다른 세계로 나아가자는 요청이기도 하다. 기후위기가 불평등을 지목하는 지금, 기후정의가 이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면 그 방향은 단연 평등사회여야 한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는 해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75년 전, 세계가 함께 합의했던 선언의 가치를 지금 여기에 다시 세우고자, '2023년 다시 쓰는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요구하는 우리, 그 시작으로 2023년 다시 쓰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함께 읽기를 요청한다. 존엄과 평등으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 [2023년 다시 쓰는 세계인권선언 전문]

이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는 모든 이의 존엄과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세계대전과 같은 인간 존엄의 말살이라는 만행을 초래했다. 그에 대한 전지구적인 반성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으나 75년이 흐른 오늘, 세계에는 여전히 인간 존엄에 대한 무시와 경멸, 나아가 혐오와 차별이 횡행하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마저 부정되고 붕괴되고 있다. 세계는 다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고 전쟁을 거부하고 도망친 이들을 냉대한다. 전쟁에 앞장서는 국가, 전쟁을 부추기는 국가가 있는가하면 국가의 무능으로 시민들이 죽어간 것에 대해 사과도 반성도 않는 국가도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지구적인 위기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한 각종 재난참사가 생명과 안전이라는 인간 존엄의 근본 가치를 흔들고 있지만, 책임져야 할 이들의 외면 속에 애도와 추모, 기억할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

우리는 모이고 말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을,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구현하고 누구나 그것을 향유할 자유를, 자유, 존엄,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인권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였지만 여전히 그 어떤 자유와 권리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며 세상은 평등과 멀어지고 있다. 구조적인 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과 난민, 어린이 청소년 등을 향한 혐오로 세를 키우는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75년전 우리는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이 무엇인지 합의하였으나 그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이 있음을, 이들의 연대와 연결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나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평등세상을 앞당기는 공동의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의 가치가 실현되는, 평등한 토대위에서 존엄한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을 향한 연대와 투쟁을 다짐한다.

2023. 12. 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2023 청소년인권 기후정의선언

**‘미래세대를 위하여’가 아닌 지금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푸르른 지구를 물려줍시다!’*

환경 보호 캠페인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청소년은 어른이 이끌어 온 기후위기 때문에 무고하게 피해를 본 안타까운 존재로 소비되곤 한다. ‘미래세대’나 ‘우리 아이들’ 같은 표현은 청소년을 현재의 주체로 보지 않고 미래의 피해자로 만들며, 현재는 불완전한 존재라 보호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 스스로 의지를 갖추고 행동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기후위기를 포함한 현대 사회 문제의 당사자이다.

환경을 위해 개인적으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잔반을 남기지 않고, 냉난방을 줄이는 청소년은 칭찬받는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회 구조와 특권층에게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사회는 청소년에게 ‘너희는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에 공헌하는 게 최우선이다’, ‘아직 너희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니 나설 것 없다’ 따위의 차별적인 말을 쏟아내며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는커녕 정보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도록 선을 긋는다.

‘성숙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미성숙한 이들’은 배제하는 사회경제 체제 아래에서, 기후위기의 피해와 책임은 기후정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힘이 있으면서도 방임하는 부유층, 기업, 정부가 아니라 ‘미성숙한 이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청소년을 비롯한 몇몇 집단은 기후위기를 불러온 자본주의 체제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따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기후취약계층’으로 호명되고 또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된다. 결국, 사회가 청소년에게 바라는 것은 ‘어른들 때문에 피해를 볼 미래세대’이지, 기후위기 상황에서 함께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를 막자는 말이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을 성숙시켜서 미래에 닥쳐올 기후위기를 막아 줄 대비책 내지 ‘자원’으로 만들자는 말은 사람들이, 특히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하는 것을 청소년에게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기후위기·기후정의 집회에서 발언하는 활동가들조차 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깊게 고민하기보다 ‘불쌍한 아이들’을 소재 삼아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모습도 드물지 않게 보인다. 이런 방식의 표현은 마치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가 아니지만, 미래의 아이들을 위하여 막아야 한다는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라는 말은 필요치 않다. 우리는 모두 이미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고, 더 악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제 ‘미래세대’라는 말은 거부해야 한다. 청소년은 ‘가여운 미래의 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이 기후위기 시대에서 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선진국, 기업 등 특권층이 ‘기후위기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을 규탄하고 책임을 요구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하는 하나의 주체이다. 청소년도 비(非)청소년도 이미 재난의 한가운데에 있다. 더는 미래를 말하지 마라. ‘미래세대를 위하여’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후정의를 위하여 동등한 주체로서 행동하자.

###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내자**

학교 안의 청소년은 학교에서 일상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것만으로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복은 각자 다른 몸이 느끼는 더위와 추위를 무시하고 획일적 복장을 강요하며 개인의 체온조절마저 학교의 규칙 아래 두는 인권침해이다. 개성실현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교복제도는 태생부터 인권침해였지만, 이상기후가 계속 심화되는 현재에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위협까지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 건물이 공공기관 건물 중 가장 저렴하게 지어지는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비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열 효율이나 방한, 방열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인 교실에는 냉방과 난방을 제대로 제공하는 데 인색하며, 그 이유로 자원 절약을 말한다. 학생들이 체온 조절에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기후위기의 심화를 냉방과 난방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푹푹찌는 한여름에도 교무실에 들어갈 때는 담요를 둘러야 춥지 않다는 이야기는, 과거, 현재에 학생인 적이 있는 거의 모두에게서 어렵



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경험인데 말이다.

개개인의 취향이나 건강 조건, 양심/종교의 자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급식제도 또한 학생들에게 에코정책을 떠밀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등장한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양, 같은 메뉴를 배급하고 컨디션이나 개인 사정, 채식/비건을 실천하는 등의 신념에 관계 없이 잔반 없이 먹을 것을 요구하고, 학생들이 남긴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을 파괴한다고 죄책감을 심어주려 한다. 대량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대량으로 배식을 하면 남는 음식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런 시스템을 바꾸고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원하지도 않는 음식을 모두 먹기를 바라는 것은 타당한 일인가.

학생들은 학내에서 학교의 규칙과 시스템을 바꾸는 데에 목소리를 내기 가장 어려운 집단이다. 때문에 에코 정책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참고 견뎌야 하는 자리로 밀려난다. 청소년이 비청소년과 같은 방식으로 자원을 소모해도, 청소년은 철이 없어서, 참을성이 없어서 자원을 낭비한다 치부하며 비청소년의 필요에 비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타당성을 판단한다. 인내심을 기르고, 싫은 것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명목하에 이 모든 것들에 교육의 이름을 붙이기까지 한다.

비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생활을 강요한다면, 과연 모두가 응당 그래야 한다며 감수할까? 이는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당연한 듯 강요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학교라는 시설에서 일상의 대부분을 집단으로 생활한다는 점은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신의 뒀을 빼앗기는 과정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어떻게 유지/운영할 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아끼며, 어떤 것에는 불편을 감수하고 어떤 것에 집중할지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내고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학생은 그저 학교에서 사육당하는 것에 불과한 처지가 된다. 이는 인간의 이윤을 위해 부당하게 좁은 축사에 갇혀 착취당하는 동물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이다. 인간도 동물도 그 누구도 자신의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을 남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삶을 강요당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교실에서 조금 더 냉난방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 교복이나 생활복의 디자인, 급식 메뉴 따위에 학생 앙케이트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에 얼마나 예산을 들이고 있으며, 이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며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자원을 분배하던 기준, 이윤과 경제적 가치를 중점에 두고 운영했던 학교 구조 자체를 바꿔내야 누구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 생활시간 보장과 생활 양식의 자유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하루하루 돌아가는 일상에 숨이 막히도록 바쁘게 살아간다. 특히 학생이라면, 학교나 학원 등 학업과 관련된 활동이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서, 청소년이 '지금' 생활시간을 스스로 구성하고 생활 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대중교통 이용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쓰기 등 환경을 위한 실천은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느리고 불편한 선택이다. 사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실천하길 원한다면, 응당 이런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시간 통제권을 보장하고, 타인의 의지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생활 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학교 수업과 방과 후 수업에 학원까지 가는 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능력개발'을 요구받는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걸어서 이동할 시간, 일회용품에 담긴 즉석식품을 사 먹는 대신 집에서 밥을 먹고 뒤처리할 시간,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릴 시간이 많을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지치도록 바쁜 생활을 하는 청소년에게 이런 것조차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학교라는 공간이 아니어도, 청소년은 양육자의 생활 양식에 강제적으로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청소년 본인이 채식을 원하더라도, 양육자가 육식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먹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청소년이 생활시간 통제권과 생활 양식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먼저 청소년의 학습 시간을 줄여라. 대한민국 사회는 청소년에게, 특히 학생에게 너무 많은 공부량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조차 '학교 밖에서 꿈을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장시간의 학습은 기후위기 시대에도 적합하지 않고, 청소년이 학업 활동 외에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기회가 줄어든다. 학교라는 공간은 특히나 '단체 생활'의 특성상 학생 개인이 원하는 활동을 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의무수업일수와 커리큘럼을 단축하는 등, 국가적, 제도적 차원에서 학습시간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오랜 시간 학교에 있어야 하는 지금의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양육자를 비롯한 타인의 통제 아래서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 삶의 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하라. 청소년은 청소년 시기를 벗어나기 전, 권리를 제한해도 괜찮은 예비의 존재가 아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청소년이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이 오롯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 **청소년을 이윤/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여기는 입시경쟁교육을 멈춰라**

한국에서 공교육은 더 이상 삶에 유용한 것을 배우고 발전시키며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아니다.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미명 하에 경쟁이 일상화된 교육은, 배운 내용이 목적이 아니라 시험 결과에 따라 분배되는 상과 별만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12년간의 경쟁이 목표로 하는 것은, 경쟁에 승리하면 더 좋은 직업, 더 높은 소득,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허구의 약속이다. 사회는 손 쉽게 더욱 많은 자원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사회가 말하는 '정당한 수단'을 거쳐 타인으로부터 빼앗아 쓸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 다른 생명체를 죽음으로 내몰 권리를 위해 교육받아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교육의 본질이 교육의 과정이나 내용이 아닌 결과에 대한 경쟁이 된 탓에 이 경쟁 자체에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자원 또한 방대하다. 변별력을 위한 시험, 이를 치르는 자원과 비용은 교육의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의 공신력과 위상을 지키고 이 결과에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출된다. 개인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공부해야 하기에, 이에 매몰되어 삶의 여러 부분에 균형감있게 분배되어야 할 생활시간과 비용들이 모두 입시 경쟁을 위해 낭비되고 있기도 하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은 사회 문화적/제도적으로 온갖 권리와 자유를 유예당하지만, 누군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쟁의 본질이다. 사회는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에게 존엄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으며, 패배했다는 사실을 본인 책임으로 전가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로 치부하고 있다. 이는 마치 인간이 자연물을 인간중심적 기준으로 가공해 소비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모습과 동일하다. 지구 전체가 인간을 위해 소비되는 자원이 되어

서는 안 되는 것 처럼, 청소년은 사회가 마음대로 가공해서 쓰다 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경쟁의 결과에 따라 개인의 삶의 안정, 생존이 좌우되는 현 교육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은 무한경쟁을 통해 승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어야 한다는 세계관을 학습하며 원자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인류 전체에 닥친 기후위기 앞에서, 빈곤하거나, 어리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경시되는 집단들이 더욱 가혹하게 그 재앙을 겪게 되는 상황을 외면하게 만든다. 때문에 인류 전체가 평등하게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 변화 모색하는 대신 자원과 능력을 갖춘 승자가 되어 각자도 생활 것을 종용당하고, 그러한 이윤추구와 경쟁은 또 다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더욱 부유한 사람/기업일수록 탄소, 석유 자원 및 에너지를 더욱 많이 소비하며, 그 결과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막중한 것 또한 이런 부유층 인구/기업이다. 이러한 부정의를 말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에코'와 '그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린워싱에 대해서만 배우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고민은 '대학입시전형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제한하고, 이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경쟁의 승자가 되는 데에 활용된다. 인간을 소모재 취급하는 교육, 자원을 더 많이 쓰고 기후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경쟁하는 교육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 **기후위기 시대에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

올해 수원 시청 앞에서 이루어진 '다이-인(Die-in) (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 행동)'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기획하고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 논란이 있었다. 바닥의 온도가 뜨거운데 교사와 활동가가 강요했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청소년의 주체적인 행동의 의미는 사라진 채 '아직 미성숙해서 잘 모른다', '어른들한테 선동 당한다' 등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다. 다양한 우려는 청소년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탐색하고, 나아가 원하는 바를 주장할 기회를 빼앗는다. 청소년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후 위기 상황,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에서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어른들이 대신하겠다'는 말은 오히려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의 결정 권한과 정보의 접근을 가로막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초대하여 기후 위기의 해결책을 묻는 자리에서도 차별적인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교육부가 진행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대화 자리에서 청소년 기후

운동 단체는 '탈석탄 선언 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은 환경교육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달라며 청소년 활동가의 말을 가로막은 일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을 단지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대응은 환경교육이 될 수 없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환경교육은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 녹색소비를 알고 준수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 자기 삶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후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상상을 통해 '탈석탄'을 요구하였지만 청소년에게 듣고 싶은 답변은 이미 정해져있었다. 청소년 참정권이나 자치, 참여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여러 공간에서 청소년이 테이블의 일원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의 권한 자체는 주어지지 않았다.

청소년이 기후 위기에 대해 걱정하고 일상적인 실천을 하는 정도의 관심은 대견해 하지만, 정치적 해결/ 대책을 요구하며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받는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위를 참석하기 위해 학교에 결석을 하려고 했으나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해야지만 학교에 빠질 수 있었던 상황, 한 청소년 기후 운동 단체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연극제 무대 위에서 침묵 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등이 지금 현실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불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며, 어른들의 입맛에 맞는 '기후 위기에 적당한 수준의 관심'만을 원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어른들이 허락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불온한 일에도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여 참여하고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공동체 안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단지 참정권이라는 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이자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온전하게 존중받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기후 위기를 어른들이 나서서 대신 해결해 주는 것, 더 공부하고 나중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기 삶의 주인이자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때 시민으로서의 감각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지금의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외침 속에서 '청소년을 더 이상 미래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라'는 선언은 우리가 기존에 반복하던 위기의 재생산을 멈추는 일일지도 모른다. 청소년 참여 없이 기후정의는 없다.

2023년 12월 16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이윤을 최우선 목적으로 작동되는 자본주의의 무한 착취는 지구도 황폐화시켜왔고, 높은 노동강도와 교대노동, 심야노동을 강요해오며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국가와 자본의 존재하지도 않는 '선의'에 기대는 것은 허상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 작업중지권과 노동자의 노동과정 통제, 노동자의 몸과 삶에 맞춘 생산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사회를 재조직할 수 있는 핵심 계급은, 다양한 몸을 지닌 노동자들입니다.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생산을 통제하고, 위험이 예측될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기후위기 시대이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해질 폭염이나 혹한 등 '정말로' 재난 직전을 마주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일터의 위험을 예방적으로 통제하고, 현장의 기준을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몸과 삶에 맞출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노동자 작업통제라는 권리 발휘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정의 실현!

밤에는 충분히 잠을 자면서 천천히/적게 노동하는 것도,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합니다. 한국처럼 야간노동과 주말 노동, 초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곳에선 이들 노동이 전-사회적으로 규제되는 것만으로도 노동시간이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 매이는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서로 잘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생산과 소비, 유통의 사이클에 제동을 걸으로써, 탄소 배출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노동자와 자연을 착취하고 죽음으로 내몰아 온 기업과 정부에, 이들이 만들어 온 다단계 지배구조에 맞섭시다. '빨리빨리'와 '효율'이 아닌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기준으로 일터와 일상에서 쉼 권리를 쟁취해 나가는 우리의 투쟁이, 자본주의 무한 생산/가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몸과 삶에 맞춘 생산방식과 속도를, 전 사회에 정착해 가는 싸움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 동아시아 민중의 기후정의 목소리를 연결하자

자본주의적 착취와 생산관계가 도입된 이래 아시아 민중은 언제나 선진국 자본의 이윤지상주의가 낳은 온갖 산업 폐수와 오염 물질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였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래 동아시아는 세계의 공장이 됐다. 동아시아 산업 발전의 핵심적 동인은 저렴한 인건비였고, 자본은 언제나 그 고통의 댓가를 민중에게 전가시켜왔다. 태국의 공단 노동자 중 74%는 공장 폐수로 인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해 우려하고, 강물의 악취로 고통받는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에서 진폐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60퍼센트는 중국 노동자들이다. 중국에선 여전히 매년 13만7천 명이 진폐증에 걸리며, 1만 명 이상이 죽는다.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면화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자본가들은 항상 저렴한 노동력을 구해 착취를 확대 재생산했다. 흑인 노예, 60~70년대 청계천의 여공들, 1990년대 중국 남부의 여성 농민공들, 21세기 이래 동남아시아의 여성 노동자들은 먼지 가득하고 습한 방직공장에서 1년 내내 하루 12시간 주 6일 이상 일해야 했다. 오늘날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의류 하청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19세기 맨체스터의 공장에서 벌어진 초과착취에 대해 소개한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라고 답할 것이다. 이처럼 제국주의 시대의 생산양식은 사라지지 않았고 위치만 달리한 채 반복되고 있다. 기후위기라는 더욱 거대하고 파국적인 환경 아래서 말이다.

2018년 7월23일 라오스의 메콩강 유역에서는 SK건설이 짓던 댐이 하청 단가 후려치기와 설계 결함에 의한 내부 침식으로 붕괴했다. 이 참사로 인해 200여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7천여명이 집을 잃었다. 댐 건설 전 고향을 떠난 2300명과 생계를 잃은 5400여명을 포함하면 적어도 1만5천여명의 생존을 파괴했다. 기업과 금융자본만 배 불리는 “녹색 자본주의”가 벌인 이윤놀음에 라오스의 가난한 민중만 목숨을 잃은 것이다.

2023년 4월, 동남아시아의 평범한 민중들은 살인적인 더위를 맞닥뜨려야 했다. 5월 6일 프롬펜 기온은 44.2도를 기록했고, 비슷한 시기 태국 방콕은 41도를 가리켰다. 2050년경 체감온도 39.4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한해에 20~50번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기온이 오르고 빙하마저 녹고 있다보니 해수면 상승은 임박한

현실이 됐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경까지 해수면은 0.6~1.1미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최대 105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저지대가 물에 잠기는 것을 뜻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암스테르담처럼 부유한 도시들은 제방을 높게 쌓아 도시를 지킬 것이고, 남반구의 민중들은 피난의 행렬을 떠나야 한다. 실제 캄보디아의 유명 브랜드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대다수는 폭염과 대기오염으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에서는 기후파괴 아웃소싱이 일어나고 있다. 선진국들이 강제하는 규칙들이 남반구 국가들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매우 저렴한 인건비로 착취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공급망 확대를 통한 생산외주화로 자국 내의 1인당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선진국 시민들의 소비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착취를 밑거름 삼아 만들어지고 있다. 유럽의 순배출량은 1990년 56억 톤에서 2018년 42억 톤으로 감소했는데, 유럽의 늘어난 소비는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공급망으로 연결된 세계 자본주의에서 국경을 기준으로 나눈 탄소회계시스템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진국 자본은 개발도상국들에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을 구조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규제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탄소집약적 생산과 환경파괴가 동아시아 전역을 지배하고 있다. 캄보디아 노동자 1명의 연간 탄소배출량이 400킬로그램인데 반해, 한국인 1명의 배출량은 그것의 38배인 15.5톤에 달한다. 그러나 오늘날 기후위기의 흑독한 대가를 맞닥뜨리고 있는 쪽은 가난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며, 이는 다시 우리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를 '탄소 식민주의'라고 말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탄소 식민주의는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민중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극소수 자본가들 에겐 막대한 부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후위기에 맞선 비상한 행동이 왜 일국적 한계가 머물러선 안 되는지 증명한다. 우리의 기후정의운동이 왜 보다 계급적으로, 보다 국제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해준다.

2022년 기후정의행진을 기점으로 한국의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에 맞서 체제전환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다. 체제전환은 결코 일국적 목소리로는 이룰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동아시아 민중 공동의 기후정의운동으로 도약해야 한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의 온상을 탐색하고, 동시대의 저항들을 연결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초국적 자본의 공급망에 따른 기후파괴, 생태파괴에 맞선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자! 크고 작은 공동행동과 연대를 통해 기후정의운동을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



는 동력으로 만들자! 폭염과 대기오염, 진폐증, 석탄발전소, 무분별한 댐 건설, 메콩강 오염 등으로 고통받는 동아시아 민중의 저항들을 연결하는 끈을 만들자! 기후정의운동이 우리 시대의 절망과 파괴에 맞선 희망의 네트워크를 만들 매개자가 되자!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선언

### - 기후정의로 체제전환의 전망을 함께 열어가자

#### 우리가 서 있는 세계

그 누구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쉽사리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다. 2023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예정이다.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기온은 1.32도 높았으며,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결의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한계치인 1.5도를 넘는 날도 80일이 넘었다. 올해도 지구 곳곳은 산불, 폭염, 가뭄, 홍수에 시달렸다. 하지만 기후와 관련된 이러한 기록들은 계속 경신되고 기후재난은 더 큰 규모로 반복될 것이다. 인류를 비롯한 현생 생물종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외치며 지난 30년 동안 반복된 각국 정부와 초국적 기업들의 해법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언한다. 시급한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현실가능한' 기술주의적, 시장주의적 해법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비현실적' 방안인 것이다. 전세계 상위 10% 부유층과 100여개의 기업들이 온실가스 대부분을 배출했다는 여러 통계들은 기후위기를 불평등과 체제의 문제로 이끈다.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더욱 혁신적인 기술을 채택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체제가 초래한 위기'라는 통찰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듯 기후위기가 촉발한 위기 감각은 위태롭게 유지되던 우리 삶의 위기들을 한꺼번에 드러냈다.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위기, 돌봄위기, 정치위기 등등. 연이은 위기들의 연쇄는 서로 다른 이름의 위기지만 결코 다르지 않은 '체제가 초래한 위기'이자 '체제의 위기'라는 것을 직감하게 한다. 지금의 체제가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들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직관은 전면적인 체제비판과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누구나 '위기'를 말하는 시대다. 모두가 입에 올리는 '위기'라는 말이 진부해지자 '붕괴', '파국'이라는 더 위협적인 단어가 회자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위협적인 '말'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니다. 종말론적 '위기'의 홍수 속에서 정작 우리가 처한 위기가 무엇에서 비롯된 위기인지, 누구의 위기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채 홀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처럼, 이 세계는 '위기'를 함께 겪을 수 있는 세계인가? 다른 세계로의 전환은 위기에 맞선 '공동의' 실천과 투쟁 속에서만 가능하다.

## 체제전환으로 재구성되는 기후정의운동

우리는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운동'으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책임이 바로 '현 체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권력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현 체제'는 무엇인가. 기후위기를 비롯한 현재 삶의 연쇄적 위기들을 초래한 체제는 바로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그 무엇이든 가장 값싸게 조달하기 위해 착취와 수탈을 서슴지 않고, 그 무엇이든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고 무한 성장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체제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연과 생태계는 수탈의 대상이자 돈벌이 수단이 될 뿐이다. 이윤추구를 향한 자본의 폭력이 사회와 자연을 향해 지구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고 이를 전환하려는 모든 운동들이 바로 기후정의운동이다. 기후위기는 바로 이 체제가 다음과 같이 작동한 결과일 따름이다.

### 자본주의는 체계적인 재생산 위기를 초래한다.

무엇이든 가장 저렴하게 조달해, 가장 비싸게 팔아치워야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연에 대한 체계적인 수탈과 파괴의 과정이다. 자본은 비인간 생명, 토지, 바다, 광물, 에너지 등을 '스스로 존재하고 저절로 이루어진' 자연이라며 재생과 순환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생산요소로 규정하고 마음껏 수탈해왔다. 특히 자본주의적 농업생산은 잉태하는 역량을 파괴하는 자연 수탈의 생생한 현장이다. 사회적 재생산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자 역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자본에게 돌봄은,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해야 할 '비용'일 뿐이었다. 장애인, 노약자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에 감금되었고, 비용과 효율 앞에서 돌봄과 상호의존이 들어설 자리는 사라졌다. 주거, 에너지, 교통, 보건과 같은 사

회 재생산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 역시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가면서, 현재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짓밟아 이윤을 쌓는다.**

자본주의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시간당 상품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공장을 꿈꾼다. 그 래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노동자에게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 주야간 교대제-야간노동을 의미한다. 24시간 돌아가는 상품생산에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 자연은 더욱 수탈당한다. 이렇듯 노동자와 자연을 제물삼아 자본주의는 한편에는 넘쳐나는 상품더미를, 다른 한편에는 궁핍한 삶과 파괴된 자연을 생산한다. 자본에 몸을 맡기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들은 그렇게 몸과 마음을 쉴 권리, 가족과 동료들 돌봄 권리, 인간다운 생계를 유지할 권리,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빼앗긴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짓밟는 자본의 속도와 전제적 권력은 공장을 넘어, 사회 전체의 속도와 생활양식을 규정짓고 그렇게 24시간 일하고 소비하는 사회가 도래했다.

### **자본주의는 차별과 배제를 통해 작동하고 이를 생산한다.**

자본주의는 시장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약속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자본은 노동력과 생산요소를 구매하는 압도적인 힘이며, 이를 통해 자본의 권력이 형성된다. 자본은 성별/성적지향, 인종/민족, 학력, 장애, 나이에 따른 차별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차별을 공고히 한다. 자본의 이윤추구 핵심 원리 중 하나는 '비용과 피해의 전가'이다. 차별과 배제는 이러한 '전가'를 가능케 한 힘이다. 여성, 특히 이주여성에게 돌봄을 전가할 수 있는 것도, 오염산업과 추출산업을 남반구 지역에 떠넘길 수 있었던 것도 차별과 배제의 힘이다. 일말의 책임도 없이 오직 떠넘기기로 버텨오던 자본주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돌봄위기를 쏟아내며 파산하고 있다.

## **다른 세계를 향한 전망과 대안으로, 자본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자**

우리는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체제전환의 전망과 대안을 요구하고 주장해왔다. 사회생태적 재생산 위기를 통해서만 작동가능한 '자본주의적 생산-재생산 체계'를 넘어, 이윤이 아닌 삶의 풍요와 상호의존, 돌봄이 중심이 되는 '재생산-생산 체계'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이윤이 아닌, 생태적 한계 속에서 충족되는 사회적 필요와 풍요를 위한 물질 기반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른 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는 돌봄이 이윤논리, 비용/편익 논리에서 자유로운 곳이다.

또한 우리는 주거, 에너지, 교통, 보건과 같은 삶의 필수재조차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 맞서, 기후위기 시대 사회적 권리에 기반한 사회공공성을 요구한다. 위태로운 각자도생의 삶 속에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려는 힘에 맞서 평등을 세우고 옹호하는 운동은 기후위기를 함께 겪어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일터에서 자본의 폭력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고 옹호해온 운동은 이제 자본의 자연 수탈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사회적 필요에 따른 생산과 산업재편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적 농업생산 아래 생존권을 위협받아온 농민들은, 자연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농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체제전환의 전망 속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요구와 주장들이, 기후위기 시대 서로를 연결하며 더욱 절실한 전환의 전망과 대안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석탄발전노동자들이 외치는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일자리 보장은, 에너지 시장화에 맞서 사회가 함께 생산하고 소비하는 필수재의 탈상품화와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필요에 따른 산업재편을 향한 구체적인 투쟁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과 대안'은 지금 이곳에 없는 사회에 대한 상상이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기후위기 시대 자본에 맞선 전환의 힘과 투쟁을 조직하는 구체적인 경로이자 방향타이다.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운동'으로 모인 우리는 오늘 선언한다.

기후위기 시대,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공동의 실천과 투쟁을 시작하자!

다른 세계를 향한 전망과 대안으로, 자본에 맞선 전환의 힘과 투쟁을 조직하자!

**2023년 12월 16일**

**선언하라, 모두의 기후정의를!**

**N개의 기후정의선언대회 참가자 일동**